

2018. 조사연구보고서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책임연구 | 박종효 사)일하는 공동체 대표
연구보조 | 박혜경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본 보고서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귀하

본 보고서를 『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1. 29.

연구자 : 박 종 효

사) 일하는공동체 대표

2018 조사연구사업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필요성 | 2 |
| 2. 연구의 목적 | 3 |
| 3. 연구 내용 및 진행방법 | 3 |
| II.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일자리정책 | 4 |
|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발달과정 | 4 |
|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 현황 | 9 |
| 3. 사회변화에 따른 일자리 환경의 변화 | 24 |
| III. 충북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의견 수렴 | 49 |
| 1. 조사 개요 | 49 |
| 2. 참여자 특성 | 49 |
| 3. 조사내용 | 49 |
| 4. 연구윤리 | 50 |
| 5. 결과 | 50 |
| IV. 결론 | 59 |
| [참고문헌] | 65 |

| | |
|--|----|
| <표1> 전병유 외의 사회적 일자리 구분 | 4 |
| <표2> 한국개발원의 사회적 일자리 구분 | 5 |
| <표3> 사회적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개념 비교 및 특성 비교 | 6 |
| <표4> 2018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 | 10 |
| <표5> 자활사업 참여자 수 | 11 |
| <표6>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형 | 12 |
| <표7>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주요내용 | 13 |
| <표8>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과제 | 16 |
| <표9> 충북 여성 인턴제 주요 내용 | 16 |
| <표10> 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 | 18 |
| <표11>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 20 |
| <표12>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문제점 | 20 |
| <표1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근로자 수 | 22 |
| <표14> 미래 기술 주요 내용 | 26 |
| <표15> 연도별 고용률 | 29 |
| <표16> 연령별 고용률 | 29 |
| <표17> 임금 총액 및 근로시간 | 29 |
| <표18> 충청북도 일자리 추진 내용 | 31 |
| <표1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과제 | 33 |
| <표20>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 | 35 |
| <표21> 커뮤니티 케어 검토 과제 | 36 |
| <표22> 마을 형성 단계별 세부 과정 | 39 |
| <표23> 마을공동체 공통형 사업 | 40 |
| <표24> 마을공동체 맞춤형 사업 | 41 |
| <표25>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 주요내용 | 42 |
| <표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발전 전략 | 46 |
| <표27>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야별 개선 방안 | 47 |
| <표28> 연구 참여자 세부 사항 | 49 |

| | |
|-----------------------------------|----|
| <그림 1> 자활사업 유형 | 9 |
| <그림 2> 충청북도 노동 현황 | 30 |
| <그림 3>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비전 및 추진과제 | 39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 불황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구조 조정이 시작되어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비용 절감, 심각한 실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현재까지 경기 불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 불안정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장기적 탄력적 인력운용 목적으로 시작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하여 고용 차별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지속되고 있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WEF)은 미래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도 기술자와 자본가에게 부가 집중되어 사회전체적인 부의 양극화 가능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신기술과 대자본에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전문가와 비전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소득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경합, 복지정책의 형평성 및 재원부담, 시니어 정치 세력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충청북도, 2017).

과거 경제 위기 시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부문의 사회적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하게 하였다. 여성의 부담이었던 보육, 노인돌보기 등이 공공부문으로 이전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확대를 꾀하고 전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김용기, 2017). 하버드대학 Dani Rodrik(1979)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회적 안전망 중의 하나이며,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식과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는 방식은 상호대체 가능하며, 특히 경기 침체에 공공부문의 경우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재를 생산, 경기 사이클 변동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고용창출 및 유지 능력을 확대한다고 하였다(김용기, 2017 재인용).

한국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생계 문제와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 대책으로 공공근로, 희망프로젝트, 자활근로사업 등 정부 중심의 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해결을 위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일자리 중심의 포용적 경제를 구현하고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반정부, 공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확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책 마련, 청년 여성 중장년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지역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흐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민선 7기 충청북도는 잠재 성장률 저하, 저출산 초고령화, 기후 변화 취약성, 에너지 및 자원고갈, 양극화와 불평등, 도시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위험요인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미래 이슈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 전략인 미래비전 2040을 수립하였다.

미래비전 2040(2017)에 의하면 충청북도 도민들은 충북이 해결해야 할 미래 도전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 해결, 교육 문화 여가 등 삶의 질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 성장 산업 발굴 및 집중 육성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부문 사회적 일자리는 민간 일자리와 비교하여 공공재를 생산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일자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특화 일자리 및 사회적 경제 지원은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취약 계층 및 청년 고용률 증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경제 및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공형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도 취약 계층 일자리 기반 확대를 위해 도-농 상생 생상적 일자리 확대를 수립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나가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 계층의 참여 비율이 높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참여자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사회 변화 속에서 양질의 근로를 담보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특화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 한다.

3. 연구 내용 및 진행 방법

- 1) 문헌조사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발달 과정 및 미래 사회의 일자리 변화 파악
- 2) 사회적 일자리 전문가 FGI 조사를 통한 충북의 사회적 일자리의 현재와 과제 파악
- 3) 1) +2) 종합 분석을 통한 사회 변화에 따른 충북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제시

Ⅱ.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일자리 정책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발달과정

1)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

사회적 일자리는 처음 시민사회 진영에서 실업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었고, 정부 역시 이를 정책 영역에 포함시켜왔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를 둘러싼 정책적 환경은 계속 변화해 왔고, 특히나 종종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가 명확한 규정 없이 섞여서 사용되곤 하기도 했다. 먼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서는 국제포럼 이후 전병유 외(2003)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정리된다(김정원, 2008).

전병유(2003)는 일자리의 성격을 공익형과 비공익형으로, 일자리의 창출 주체를 국가, 공공, 민간으로 구분한 후 일자리의 성격과 창출·운영주체가 모두 ‘사회적’이라는 개념을 만족하는 것은 공익형 일자리로서, 이 중 NPO(NGO)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자활공동체) 등이 행하는 공익형 사업만을 포함한다고 주장하고, 여기에 빈민의 사회적 배제 해소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공익형 일자리까지 사회적 일자리로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전병유 외의 사회적 일자리 구분

| | 공익형 일자리 | 비공익형 일자리 |
|----|-------------------------------------|----------|
| 국가 | 국가의 고유한 행정서비스를 행하는 일자리 | |
| | 개인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에서 생겨나는 일자리 | |
| | 공공근로(빈민에 대한 공적 일자리 창출) 일자리 | |

| | 공익형 일자리 | 비공익형 일자리 |
|----|---|---------------------------------------|
| 공공 | NPO(NGO)등이 행하는 공익사업에서 생겨나는 일자리 | |
|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자활공동체) 등에서 공익형 사업을 할 경우 생겨나는 일자리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자활공동체) 형태로 행해지는 비공익형 일자리 |
| 사적 | 민간 영리기업에서 행하는 복지서비스, 환경사업, 사회간접 자본의 건설 등에서 생겨나는 일자리 | 시장에서 일반 기업 활동으로 생겨나는 일자리 |

자료: 전병유(2003).“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2006)은 사회적 일자리를 수행 주체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사회적 일자리를 공공부문형 사회적 일자리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는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를 협의의 사회적 일자리로 구분하고 있다.

<표 2> 한국개발연구원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구분

| 대분류 | 수행 주체 | 민간의 역할 | 세분류 | 사업명 |
|----------------|-------------|-----------------------|-----------------|--|
| 공공 부문형 사회적 일자리 | 국가 직접 수행 방식 | 역할 없음 | 공공 부문형 사회적 일자리 | · 공공산림정비 숲 가꾸기 사업 ·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 |
| | | 역할 없음 | 정부 직접수행방식 | · 방과 후 교실 사업 · 장애아 교육보조원 ·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
| 협의의 사회적 일자리 | 민간 위탁 방식 |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공공근로성 사업 | 정부지원을 통한 민간위탁방식 | · 방문도우미사업(중증노인, 장애인) ·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 연극 국악 영화시간제 강사풀 · 아동 복지시설 문화 예술 교육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

| 대분류 | 수행 주체 | 민간의 역할 | 세분류 | 사업명 |
|-------------|----------|------------------------------|----------------------------------|--|
| 협회의 사회적 일자리 | 민간 위탁 방식 | 민간 자원이 결합되어 수익구조 확보를 추구하는 방식 | 민간 위탁을 통한 수익 구조 확보 및 민간 자원 결합 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 사회복지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

자료 : 한국사회개발연구원(2006).“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언”.

2009년 이후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선제적 투자를 통한 사업 육성 차원에서 개념과 용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일원화하였으나(이철선 외 2013), 정책적인 접근의 관점을 볼 때, 사회적 일자리가 일자리(고용복지)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국민 수요에 기반을 둔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표 3>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개념 및 특성 비교

| 구분 | 사회적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 |
|----------|---|---|
| 개념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개인 또는 사회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제고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인하여 생성되는 일자리 |
| 일자리 제공주체 | 공공 비영리 단체 | 공공,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
| 주요대상 |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 사회취약계층+일반 (전문 역량 보유자) |

| 구분 | 사회적 일자리 | 사회서비스 일자리 |
|----|----------------------|------------|
| 관점 | 일자리 + 복지(고용복지, 사회보장) | 산업구조, 경제 |
| 가치 | 공공성(공익성)강조 | 시장성(경제성)강조 |

자료 : 최조순외,경기복지재단(2016).“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관계는 상당부분 중첩되는 형태로 존재하며, 사회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공익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 지원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최조순 외, 2016).

2) 사회적 일자리의 탄생 배경 및 발달과정

1990년대 후반 외환 위기로 빈곤과 실업이 커다란 사회 문제화 되던 시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내 제반 세력들의 노력이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구호 활동’에 주력을 하던 각 지역의 비영리 조직들 중 일부는 차츰 ‘일자리 창출’로 활동의 방식을 변경시켜나간다. 이들이 진행하던 건설 및 생산공동체 운동을 하는데 있어 규모의 경제성과 자본 조달 능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사양 산업으로 수익 창출에 있어서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생산 공동체 운동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6년부터이다. 1997년부터 「생활 보호법」의 개정으로 5개의 자활지원센터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사업 모델은 봉제, 건설, 청소, 도시락 등과 같은 시장 진입형 창업 모델로 전개 되었다. 정부는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 3월 ‘실업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생산인 일에 실직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한 실업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김영철·이민환, 2007). 공공근로 민간 위탁 사업을 통해 비영리 조직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 자활 지원 사업을 포함시켜 빈곤층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게 된다.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복귀가 어려운 실업자들과 장기실직자 빈곤계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문제 의식은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집약되었다. 2000년 12월 성공

회 대학교에서 있었던 <빈곤과 실업 극복을 위한 국제 포럼>은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진 최초의 장이었으며, 유럽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한국적 변용의 측면에서 사회적 일자리 개념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시민 사회 진영의 문제 제기와 실천의 조직화를 정부 나름대로 수용하는데, 그 시작은 2000년 10월부터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의 자활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활 사업은 수급자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일자리로서의 성격은 매우 취약했다(김정원, 2008).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03년부터 시범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 일자리는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출되는 일자리로 규정되어 있다.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실시될 당시 8개 시도에서 시범으로 우선 실시되었으며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단체를 공모·선정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였다. 2004년에는 시범사업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인건비 외에 사회 보험료도 추가로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공익형과 수익형으로 구분하여 수익형 사업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기존 사회 일자리 사업의 부분이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5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한 법안을 마련되기 시작하여, 복지, 교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도 창출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기업을 육성함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2006년 12월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통과함으로써 2007년 7월부터 시작되었다(김영철·이민환, 2007). 이러한 시기에 보다 다양한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2004년부터 노인의 보충적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를 근거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 2009년 1차 실시로 차상위 계층 가구,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25만여 명에게 6~11월까지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했고, 2010년 2차 사업비 5,727억 원을 투입해 근로취약계층 10만 명에게 3월~6월까지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했다(매경시사용어사전, 2018).

2.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추진 현황

1) 자활 사업

자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의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자의 자활 능력과 사업 유형에 따라 ① 근로 유지형, ② 사회서비스형, ③ 인턴·도우미형 ④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구분한다.

<그림 1> 자활 사업 유형



자료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자활사업 안내(1).

<표 4> 2018년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기준

(단위 : 원/인·일)

| 구분 | 시장진입형 /기술 자격자 | 인턴 도우미형 | |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 근로유지형 |
|--------------|---------------------|--------------------|----------------|-------------------|-----------------|
| | | 복지자활 도우미 인턴형 | 사회복지시 설 도우미 | | |
| 지급액계 | 42,210 /44,210 | 42,210 | 38,910 | 38,190 /40,190 | 27,110 |
| 급여단가 | 38,910 /40,910 | 38,910 | 34,890 | 34,890 /36,890 | 23,810 |
| 실비 | 3,300 | 3,300 | 3,300 | 3,300 | 3,300 |
| 표준소득 액(월) | 1,011,660 | 1,011,660 | 907,140 | 907,140 | 619,060 |
| 비고 | 1일 8시간, 주5일 | | | | 1일 5시간, 주 5일 |

자료 : 보건복지부(2018).“2018년 자활사업 안내(Ⅰ)”.

김윤영 외(2018)의 연구 자료에서 제시한 보건복지부 통계연보(2017)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자활사업 총 참여자 수는 99,574명이며, 자활사업 총 참여자 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 지원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을 제외한 자활근로 참여자 수는 39,150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활사업 차명자 중 근로능력이 낮은 빈곤층이 참여할 수 있는 근로 유지형 자활의 경우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윤영 외, 2018).

<표 5> 자활사업 참여자 수

| 구분 | 총 참여자수 | 보건복지부 | | | | | | | | | | | | | | |
|----|---------|--------|--------|-----------|-----------------------|-------|-----------|--------|----------|----------|-----------------|------------------|----------------|----------------------|------------------------|-----------|
| | | 계 | 자활근로 | | | | | | 창업지원 | | | | | | | |
| | | | 소계 | 시장 진입형 | 사회 서비스 일자리 형 | 인턴형 | 근로 유지형 | 소계 | 자활 기업 | 창업 자금 | 희망키 움통장 I | 희망키 움통장 II | 내일 키움 통장 | 사회 적응 프로 그램 | 성과중 심자활 시범사 업 | 고용 노동부 |
| 05 | 86,562 | 78,470 | 65,942 | 9,484 | 21,792 | 426 | 39,240 | 4,101 | 3,363 | 738 | - | - | - | 8,427 | - | 8,092 |
| 06 | 87,209 | 82,955 | 69,897 | 9,583 | 23,639 | 431 | 36,244 | 4,874 | 4,310 | 564 | - | - | - | 8,184 | - | 4,254 |
| 07 | 87,651 | 83,800 | 67,907 | 10,857 | 24,961 | 279 | 31,810 | 7,236 | 6,724 | 512 | - | - | - | 8,657 | - | 3,851 |
| 08 | 70,801 | 68,558 | 57,984 | 10,647 | 23,900 | 145 | 23,292 | 8,697 | 8,192 | 505 | - | - | - | 1,877 | - | 2,243 |
| 09 | 78,047 | 76,190 | 62,404 | 14,090 | 28,097 | 156 | 20,061 | 10,118 | 9,603 | 515 | - | - | - | 1,668 | 2,000 | 1,857 |
| 10 | 88,839 | 86,399 | 60,162 | 13,294 | 27,178 | 83 | 19,607 | 9,960 | 9,458 | 502 | 10,698 | - | - | 1,367 | 4,212 | 2,440 |
| 11 | 87,226 | 79,311 | 60,385 | 13,228 | 28,276 | 26 | 18,855 | 10,579 | 10,116 | 463 | 4,093 | - | - | - | 4,254 | 7,915 |
| 12 | 83,368 | 69,958 | 53,342 | 12,128 | 26,042 | 302 | 14,870 | 9,339 | 8,953 | 386 | 3,046 | - | - | - | 4,231 | 13,410 |
| 13 | 96,659 | 81,651 | 48,002 | 8,186 | 21,966 | 5,932 | 11,918 | 88,59 | 8,629 | 230 | 9,083 | - | 5,274 | - | 10,433 | 15,008 |
| 14 | 98,937 | 80,990 | 40,234 | 7,136 | 18,640 | 4,481 | 9,977 | 8,911 | 8,580 | 331 | 5,286 | 10,257 | 2,216 | - | 14,086 | 17,990 |
| 15 | 101,626 | 75,532 | 40,724 | 7,258 | 20,149 | 3,837 | 9,480 | 7,755 | 7,511 | 244 | 2,680 | 14,989 | 3,241 | - | 6,143 | 26,094 |
| 16 | 99,574 | 69,925 | 39,150 | 7,784 | 19,771 | 3,552 | 8,043 | 4,662 | 6,662 | - | 3,027 | 18,460 | 4,626 | - | - | 29,649 |

자료 : 김윤영 외(2018).“보건복지부 통계연보 2017”.

김윤영 외(2018)의 연구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할 수 없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유용함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낮은 급여 수준과 불안정한 일자리는 실제 참여자들의 삶에 자립 자활을 돕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활 사업에 참여하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제도 수급권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2)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고실업 시기에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자하는 실업 대책사업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 28조에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취약 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고용 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참여가능하다.

<표 6>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유형

| 유형 | 사업구분 | 주요내용 (사례) |
|----------------------|--------------------------------|---|
| 【1유형】 지역자원 활용형 | ① 지역특산물 상품화 및 전통기술습득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짚풀 공예를 통한 지역전통기술 사업 ○ 그루터기 목공예(인제 목기) 운영 사업 ○ 한지공예 기념품제작 및 판매사업 ○ 산나물 체험단지 조성사업 |
| | ② 시책일자리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 시책사업 ○ 청년 희망 뿌리단 사업 ○ 일자리안정자금 현장 홍보 지원 사업 ○ 쪽방촌 공동작업장(꽃피우다) 운영사업 * 시책사업 제한 : ① 국가시책 ② 지자체 연두업무보고 포함 등 외부 표시(계재) 시책 일자리사업 중 1,2유형(전통자원·기술습득·민간취업)에 준하는 사업 |
| | ③ 자원재생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 및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 쌀뜨물 EM발효액 생산보급 운영사업 ○ 정크디자인센터 운영사업 - 폐가구 및 폐의류 리폼제작 ○ 조경부산물 퇴비화사업 |
| 【2유형】 지역기업 연계형 | ④ 공동작업장 운영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마음 나눔터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늘품공방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
| | 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 일자리발굴단 운영(구인업체 정보제공 등) |
| 【3유형】 서민생활 지원형 | ⑥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 제외 |
| | ⑦ 다문화 가정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강사 양성 프로그램 ○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다문화사회 이해 사업 ○ 다문화자녀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 지역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
|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 | ⑧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희 공간·시설활용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수유단지 등 조성관리 생산사업 ○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사업 ○ 아름다운 학교만들기 사업 - 벽화·POP·폼아트 등 기술 습득 ○ 주전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

자료 : 행정안전부(2018).“2018년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안내”.

3) 희망근로 프로젝트

희망근로프로젝트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방자치 단체별로 사회적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및 안정적 일자리 취득을 지원하고, 재래시장이나 영세 상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희망근로 상품권’의 지급을 통해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2010년 기준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이며, 급여는 현금과 상품권을 일정 비율로 섞어서 지급한다. 2009년 1차 희망 근로 프로젝트는 복지대책 차원에서 사업비 17,070억원을 투입해 차상위 계층 가구, 휴폐업 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25만여 명에게 6월 ~ 11월 까지 6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했고, 2010년 2차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실업대책 차원에서 사업비 5,727억 원을 투입해 근로 취약계층 10만 명에게 3월 ~ 6월 까지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했다(매경시사용어사전, 2018).

4)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의 보충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은 지난 10년간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노인 복지 서비스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매김하였다. 2016년 기준 참여 노인은 전체 노인의 6.1%를 차지하며, 참여 기관은 1,200개, 전담 인력은 2,685명에 이른다(강은나 외, 2017). 주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7> 노인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주요 내용

|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
| 노인 사회활동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
| | 재능 나눔 활동 |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 나눔 화동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유도 |

자료 : 보건복지부(2018).“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Ⅱ)”.

| 구분 | 유형 | 주요내용 |
|--------|------------|---|
| 노인 일자리 | 시장형 사업단 |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
| | 인력 파견형 사업단 |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와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
| | 시니어 인턴십 | 만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 기회를 촉진 |
| | 고령자 친화 기업 |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설립을 지원 |
| | 기업 연계형 | 기업이 적합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직무모델 개발, 설비 구입 설치, 4대 보험료 등 간접 비용지원 |

자료 : 보건복지부(2018).“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Ⅱ)”.

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2년은 60 ~ 64세가 4.6%였으나 2016년은 1.9%로 낮아졌고, 65 ~ 69세는 20.0%에서 14.8%, 70~74세도 38.7%에서 31.3%로 점차 낮아졌다. 반면, 75 ~ 79세는 27.2%에서 34.0, 80세 이상은 9.4%에서 18.0%로 점차 증가하였다. 즉, 74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참여자수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참여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익활동은 74세 이하 집단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75세 이상 집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과 2014년은 70 ~ 74세 노인들의 참여비율이 38.7%와 35.4%로 가장 많았고, 74세 이하 집단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75세 이상 집단은 증가하였다. 인력파견형은 69세 이하 집단이 65% 이상으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2016년 기준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69세 이하 노인은 13.2%, 시장형사업단은 23.6%, 인력파견형은 66.8%로 연령이 낮은 노인이 인력파견형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시장형 사업단과 공익활동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강은나 외, 2017).

노인 일자리사업 연도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319,536백만원에

서 2013년 335,368백만원, 2015년 681,601백만원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예산정책처, 2016).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전체 노인 대비 4.3%였으며, 기회가 되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18.2%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수요는 공급량에 비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급량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나 외, 2017).

사업의 효과로는 노인의 심리정서적, 사회관계적, 그리고 건강증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노년기 우울감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소득창출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나아가 삶의 질 차이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강은나 외, 2017).

5) 여성 일자리 사업

국가 안팎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요구되고 있다(민경자 외, 2017).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부담이었던 보육, 노인돌보기 등이 공공 부문으로 이전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 확대를 꾀하고 전 후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 일자리 지원은 지속가능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볼 수 있다. 여성일자리 중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여성 경력단절의 심화 및 장기화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사회적 손실을 초래 할 수 있기 때문에(오은진 외, 2008), 한국 사회에서 여성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위한 주요 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있다(민경자 외, 2017).

정부는 2008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을 제정하여 여성 인력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최은희, 2017). 또한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은 2차(2015-2019)까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최은희, 2017).

<표 8>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과제

| 중점과제 | 세부과제 |
|----------------------------|----------------------------|
| 경력단절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강화 |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활성화 |
|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 전문화 |
| |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고용연계 강화 |
| 여성 취업지원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량강화 |
|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서비스 다변화 및 접근성 제고 |
|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및 처우개선 |
| | 여성창업 지원 강화 |
| | 여성 농어업인의 취·창업 역량강화 |

자료 :여성가족부(2014).“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 경제 활동 촉진 기본 계획(안)”.

충청북도는 2006년부터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과 경력유지를 실질적으로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충북여성 인턴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충북 여성인턴제의 분야의 추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충북 여성 인턴제 주요 내용

| 분야 | | 직종(과정) 명 | 직종 수 | | 과정 수 | |
|---------------------|-------------|---|------|---|------|----|
| 돌봄 및 지역 복지 | 아동청소년 | 에듀케어, 인성교사 어린이 독서관리사 (독서지도 보조교사) (어린이 독서관리사) | 3 | 8 | 6 | 13 |
| | 노인 및 영유아 | 경로당복지 지도사, 휴식케어 지도사 영유아 보육 돌보미 | 3 | | 4 | |
| | 지역사회 | 지역방문상담원 , 협력사례 관리자 | 2 | | 3 | |

| 분야 | | 직종(과정) 명 | 직종 수 | | 과정 수 | |
|-------|----|--|------|---|------|---|
| 행정 관리 | | 노동사무원 (노동사무 관리원, 노무행정사무원) 경로당 행정도우미 지역수요맞춤형 (여성회관 교육수료, 직업교육(훈련)수료자, 지역수요 맞춤형) | 3 | | 10 | |
| 전문분야 | | 원어민 보조교사 창의논술 지도사 청소년커리어코치 역사문화체험지도사 지역사회조사원 디지털미디어 제작자 (여성 VJ전문가) (디지털미디어 제작자) 전략산업 맞춤형 (전략산업분야) (전략산업 맞춤형) | 7 | | 11 | |
| 취·창업 | 취업 | 취업코디네이터 특성화취업코디네이터 | 3 | 4 | 8 | 9 |
| | 창업 | 지역창업플래너 | 1 | | 1 | |

자료 : 충북연구원(2017).“충북여성인턴제의 성과발전과 발전방안”.

충북여성인턴제의 성과평가와 발전방안 연구(2017)에서는 충북 여성인턴제가 참여여성들의 성장과 역량강화,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턴 종료 후에는 절반 이상의 여성들이 여전히 취업 및 고용 유지 혹은 가사, 육아, 가족 관계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한계는 낮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반영 되어 있고, 또 이로부터 연유한다고 보여 진다고 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종 개발도 중요하

지만 단일 방식으로 인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취업 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민경자 외, 2017).

6) 장애인 일자리 사업

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화), 장애인복지법 제 21조(직업),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의 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를 근거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수용 외, 2018).

2007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그동안 일자리 유형을 확대 및 세분화하였고, 참여 대상자의 확대를 통한 국가지원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 지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다. 또한 세 차례(2011, 2014, 2017)에 걸친 장애인일자리 사업 종합 평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제적 가치도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 회복, 가족관계 강화, 경제적 개선 등 개인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일부 참여자는 자격증 취득 등 직업기술 요건들을 갖추기도 하는 등 그 성과가 적지 않다(이인재 외, 2017 ; 이수용 외 2018).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 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요 내용

| 구분 | 일반형 | | 복지형 | | 특화형 | |
|----|-----|-----|-----|------------|----------------|-------------------|
| | 전일제 | 시간제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 | | | | | | |

| 모집 기관 |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및 민간위탁기관 | | | | | |
|---------------|-----------------------------|----------|--|--------------------------|----------------------------|----------------------------|
| 구분 | 일반형 | | 복지형 | | 특화형 | |
| | 전일제 | 시간제 | 참여형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
| 참여 기간 | 1월~12월(12개월) | | | | | |
| 참여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특수교육 기관 고등부 3학년 및 전공과 학생 | 만 18세 이상 안마사자격을 취득한 시각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지적장애 및 자폐성 등록 장애인 |
| 근무시간 (1월-11월) | 주 5일 (40시간) | 주 20시간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 주 5일 (25시간) | |
| 인건비 | 1,574,000원 | 787,000원 | | | 1,094,000원 | 982,000원 |
| 근무시간 (12월) | 주 37.5시간 | 주 19시간 | 422,000원 | | 주 5일(23.5시간) | |
| 인건비 | 1,476,000원 | 746,000원 | | | 1,032,000원 | 927,000원 |
| 업무 내용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 | 도서관 사서보조,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리, 디앤디케어 등 참여자의 직업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직무 수행 | | 어르신 대상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 | 요양 보호사 업무 보조 |

자료 : 보건복지부(2018),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연도별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1>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

(단위 : 명)

| 사업유형 | | 연도 | | |
|---------|----------------|-------|-------|--------|
| | | 2012년 | 2014년 | 2018년 |
| 일반일자리 | 전일제 | 3,500 | 4,844 | 4,746 |
| | 시간제 | | | 1,525 |
|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 300 | 600 | 76 |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 - | 300 | 277 |
| 복지일자리 | | 7,700 | 8,850 | 10,044 |

자료 : 한국장애인 개발원(<https://www.koddi.or.kr>).

이수용 외(2018)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2>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

| 영역 | 주요내용 |
|----------|---|
| 사업자체 | 예산확보, 일자리 확충(양, 질), 민간형 일자리로의 전이 필요,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복지혜택 및 휴가 보상제도 도입 필요, 참여자의 일반 고용 시 인센티브 지급 필요, 다양한 연령을 고려한 연령별 타겟 일자리 마련 필요, 사업 반복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 참여 대상 선발 기준 마련, 사업 목적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적정 사업명 제시 필요 등 |
| 관리 /전달체계 | 구직활동지원과 취업알선기관 연계필요, 선발 및 운영과정에서 전문기관 연계 혹은 전담인력의 필요성 대두, 인력 및 권한 대폭 강화필요, 민간부문 일자리 진출 수 등 산출기준의 성과 지표 필요 등 |
| 정책 | 고용전이 대책 필요, 일자리사업 목적성 명확화 필요 중앙지원 체계강화 필요, 장애인일자리사업 근거법 확대로 사업의 기반 강화 필요 등 |
| 기타 | 일자리 관련 통계 자료 구축, 교육(참여자, 담당자 대상 등), 교육자료 다양화, 직업재활서비스 기관의 범위와 정의의 명확화 필요, 기초수급자 근로유인방안 필요, 장애인일자리 모델 이론 정립 필요 등 |

자료 : 이수용 외, 한국장애인개발원(2018),“장애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②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 사업장 제도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확산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상시 근로자의 30%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그 중 중증장애인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중증 장애인의 고용 인원을 살펴보면, 상시 100명 미만은 상시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 300명 미만은 상시근로자수의 10%에 5명을 더하고, 300명 이상은 상시근로자수의 5%에 20명을 더하여 고용해야 한다(이수용 외, 2017).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는 고용 의무 사업주가(모회사)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표준 사업장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률에 산입하는 제도이다. 표준 사업장 요건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소유)하고 있는 경우(2011년 이후 공동투자형도 인정), 모회사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으로 산입하되, 경증 남성 1명을 0.5명으로 간주하고 있다. 표준 사업장의 인 증은 공단에 의해 이뤄지며 표준 사업장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인증된 표준 사업장에 한해 명칭 사용, 세제 혜택, 공공기관 우선 구매, 모기업 고용 인원 산입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수용 외, 2017).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수, 중증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은 다음과 같다(이수용 외, 2017).

<표 1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장애인근로자 수, 중증근로자 수, 장애인 고용률
(단위: 개소, 명, %)

| 구분 | 기업체수 | 최대 | 평균 | 표준편차 |
|-----------|------|-----|------|-------|
| 장애인 근로자 수 | 53 | 252 | 45.0 | 52.47 |
| 중증 근로자 수 | 52 | 182 | 30.8 | 33.05 |
| 장애인 고용률 | 53 | 100 | 68.2 | 23.43 |

자료 : 한국장애인공단(2017).“장애인표준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회사형 사업장 53개 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는 평균적으로는 45.0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중증 장애인 고용 현황의 경우 근로자 수가 최대 182명이고, 평균적으로는 30.8명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평균은 일반형 표준 사업장의 평균 13.7명보다는 훨씬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평균 근로자 수를 통해 비교해 볼 때, 일반형 표준 사업장이 77.0%(평균 장애인 근로자 수 17.8명, 중증 장애인 근로자 수 13.8명)인 것에 비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의 경우 그 비율이 68.4%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중증 장애인 근로자 수의 비율만으로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의 효과를 비교하기는 힘든 면이 있을 것이다. 한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68.2%이었으며 근로자 전원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사업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고용률 평균 68.2% 역시 일반형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 54.9%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수용 외, 2017).

7)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4).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부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2016년 기준으로 9개 부처의 58개 사회서비스 사업을 통해 총 142만 3000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2016년도 한 해 동안만도 전년 대비 9만 5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유태균, 2017). 그러나 이러한 성과 규모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래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이는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도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이로 인해 정부 사업 중 어떤 것이 사회서비스 사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비롯된 문제이다(유태균, 2017).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규모는 구체적인 숫자보다도 최소값과 최댓값으로 정의되는 '범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최소값은 2016년 기준 약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값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관련 자료 중 정확도가 가장 높은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 관련 일자리에 근거한 값이다.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사업의 예산은 2016년 기준 1조 2,660억원이며 이는 2007년의 예산 892억원에 비해 무려 14배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사회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서 상당한 성과로 이루어졌는데 2016년 기준 전국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참여기관 수는 1만 241개이며, 약 15만명이 사회서비스 공급자로 알려져 있다(유태균, 2017). 이제까지 보고된 관련 부서의 자료(그리고 각 부서의 사회서비스 개념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 근거할 때 정부 재정 투자로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는 최 15만명에서 최대 142만명(보건복지부, 2016)규모로 추정된다(유태균, 2017).

2018년 8월에 발표한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조교사나 아이돌보미, 아동 안전 지킴이, 성폭력 피해 지원, 장애인 생활 체육 지도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 4천개 창출 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사회변화에 따른 일자리 환경의 변화

1)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베이비 부머의 대규모 일차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퇴직으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되고 있다(박가열 외, 2016).

클라우드 슈밥은 제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저서에서 72억명인 세계 인구가 2030년에는 80억명, 2050년에는 90억명으로 증가하는데, 이 때 함께 형성된 강력한 인구구조는 '고령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 2016).

한국의 경우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며,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의 대규모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하였으며(박가열 외, 2016), 특히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경제를 지탱하는 생산가능 인구는 2050년까지 1000만명 이상 감소하여 2060년에 2,187만명(총 인구의 49.7%)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인재, 2017).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2005년 11.6%에서 2015년 14.5%로 증가하여 2035년이 되면 23.0%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령화 지수는 2005년 63.1%에서 2015년 106.7%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에는 355.2%로 예측되고 있다(충청북도, 2018)

사회 노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부양해야 할 노령화 인구는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클라우드 슈밥, 2016). 이는 재정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를 물론이고 노동력 감소와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성장 잠재력 약화 등 노동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인재, 2017).

2) 4차 산업혁명과 과학 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슈밥은 2016년 발간한 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에서 4차 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혁명’은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나, 역사 속 혁명은 신기술과 새로운 세계관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와 완전히 변화시킬 때 발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그 이전의 산업혁명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그동안 우리 인류에서 나타난 산업혁명들을 시기와 특징별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제 1차 산업혁명은 1760 ~ 1840년경에 걸쳐 발생하였으며, 철도 건설과 증기 기관의 발명을 바탕으로 기계에 의한 생산을 이끌었다. 제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어졌으며, 전기와 생산 조립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제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메일프레임 컴퓨팅(1960년대), PC(1970년대와 1980년대), 인터넷(1990년대)이 발달을 주도했으며, 이 세 가지 산업 혁명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논의를 살펴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을 설명하는 다양한 정의와 학문적 논의를 살펴봤을 때, 오늘날 우리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에 있다고 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미래사회 10대 변화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 인간, 사회의 세 영역에서 급격한 진화가 촉발되는 가운데, 모든 것이 디지털 데이터로 정의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데이터, 네트워크, 알고리즘, 아키텍처 중심의 ICT 중심의 양적·질적 변화는 모든 것을 수집하고, 연결하고, 지능화 시켜 ‘새로운 눈’이라는 기술 진화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ECOsight 3.0을 통해 기술·인간·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Tech-Contour Map를 기반으로 50대 미래 기술 중 주목해야 할 7대 기술로, 딥헬스 신약 개발 플랫폼, 로봇인터넷, 초고속 충전, 2차원 나노물질, 블록체인, 데이터 캐피탈리즘으로 제시하였다(이승민 외, 2015).

미래창조과학부 미래 준비위원회의 미래 이슈 분석에서는 맥킨지 컨설팅 그룹, MIT, IBM, WEF, 가트너 등 국외 전문기관이 발표한 유망기술과 삼성 경제 연구소, 한국과학기술 평가원, 한국 과학 기술 정보원, 특허청 등 국내 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유망기술 등을 참고하여, 기존의 기술 분류나 표준 분류 등의 체계와 관계없이 유망하다고 발표한 기술(단위기술, 시스템기술)을 대상으로 도출하였다(이광형 외, 2015).

<표 14> 미래 기술 주요 내용

| 기술 | 주요 내용 |
|------------|--|
| 사물 인터넷 |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기술을 의미,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 홈,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카 등 |
| 빅데이터 | 기존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 구성원에 따른 맞춤형 서빙 구현, 범인 검거 등에 활용 |
| 인공지능 | 지성을 갖추고 사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치를 의미, 인간 체스 챔피언과 겨루어 이긴 IBM의 딥블루, 휴머노이드 로봇, 빅데이터-인공지능 결합을 통한 감성 로봇 등 |
| 가상현실 |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통하여 실체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실제처럼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HCI), 원격 의료, 홀로그램 등 |
| 웨어러블 디바이스 |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가능하거나, 피부에 직접 부착하거나, 복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디바이스를 의미, 의복, 시계, 안경, 건강기기 등에 사용되어 신체기능을 대체하거나 엔터테인먼트 용도 등으로 활용 |
| 줄기세포 | 무한증식이 가능한 자가 재생산과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만능 세포를 의미, 장기이식을 통한 만성질환 치료, 줄기세포 이식을 통한 장기 재생, 혈액 대체를 통한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함. |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는 기술로 유전자와 같이 생명현상에 관여하는 분자를 조작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산물을 얻어 내는 기술을 의미, 인슐린이나 성장호르몬의 대량생산, 태아의 유전적 기형검사, 유전자 재조합식품, 유전자 선택 태아, 개인맞춤형 의료, 희귀종 유전자 은행 등을 가능하게 함. |
| 분자영상 | 세포나 그 이하 단계의 생물학적 과정을 생체 내에서 영상화하여 그 특성을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기술을 의미, MRI, PET-CT처럼 인체를 절제하지 않고, 암 뇌졸중과 같은 중증질환의 조기 발견에 활용 |
| 3D 프린터 | 3차원 제품의 형상을 디지털로 설계 및 스캔하여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쌓아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 하는 기술을 의미, 조립과정이 없는 제품 생산, 인공 관절 및 뼈 제조 등에 활용 가능 |

| 기술 | 주요내용 |
|---------------|--|
| 신재생 에너지 |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환경 위해성이 적은 에너지를 의미 태양광, 풍력, 조력, 지열, 폐기물/바이오 에너지 등 |
| 온실가스 저감 기술 |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CO2, CH4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포함하여 감출시키는 기술을 의미, 전기자동차,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 탄소 순환형 바이오 화학 공장 등 |
| 에너지 자원 재활용 기술 | 에너지자원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 에너지 하베스팅, 플라스틱 재활용, 희유금속 재활용, 핵연료 재활용, 폐수 재활용 등 |
| 우주 기술 | 우주 물체의 설계, 제작, 발사 운용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 개발과 우주공간의 이용 탐사와 관련되는 기술을 의미. 우주발사체, 기상환경 위성, 달 탐사선, 우주의 희소자원 탐사선 등 |
| 원자력 기술 | 원자핵 반응으로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그 반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 원자력 발전, 핵융합 발전, 동위원소를 활용한 정밀 측정, T-ray 등 피폭량이 적은 비파괴적 검사에 활용 |

자료 : 이광형 외, 미래창조 과학부 미래 준비 위원회(2015).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기준으로 일자리 510만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박가열 외, 2016). 클라우드 슈밥 회장은 현재의 과학기술 발전은 노동 시장은 전문적 기술이라는 제한된 범위로 더욱 편중될 것이며, 이렇게 새로운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저숙련 노동력이나 평범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이 주도하는 생태계에 완벽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016년 세계 위험 보고서에서도 세계적 위험 사안과 13개 글로벌 트렌드 가운데 소득 격차 확대, 실업 혹은 불완전 고용 그리고 심각한 사회 불안 사이에 가장 큰 상호 관련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날에는 중산층 직업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난 20년간 전통적으로 중산층을 결정지은 네 가지 속성(교육, 건강, 연금, 그리고 주택)의 실적이 인플레이션보다 열악했다. 중산층에게 있어 기회를 제한하는 승

자 독식 체제의 시장 경제는 사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포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미래 창조과학부(2015)기술 영향 평가 자료의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관련 해외 연구 사례 분석 결과를 보면 Oxford는 컴퓨터화로 인하여 미국 일자리의 47%가 없어질 위험에 있으며, 특히 운송업자, 사무직과 행정직, 노동생산 직종이 고위험군으로 제시되었다. BCG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높은 임금 상승률 및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로봇으로 인한 노동 대체률이 특히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한국은 세계평균보다 4배나 높은 노동 대체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5년이 되면 40%의 제조업의 노동력이 로봇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맥킨지의 최근 미국 내 직업 및 기술력 분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800개 직업 중 자동화로 인해 완벽하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5%에 불과하나, 직업 800개 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2,000가지 작업을 분석하자 45%나 자동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고도의 기술을 지닌 최상위 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겠지만, 단순기술, 기능직 노동자의 경우 새로운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소멸되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 내부에서는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자가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장기 실업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실업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재교육훈련 기회의 확충과 사회적 안전망에 따른 요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부산발전포럼, 2017).

3) 노동 환경의 변화

① 충청북도 고용 현황

충청북도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5년 58.1%에서 2015년 62.1%로 연평균 0.3%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추세라면 2035년까지 66.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연도별 고용률

| 구분 | 2005 | 2010 | 2015 | 2020 | 2025 | 2030 | 2035 |
|-----|------|------|------|------|------|------|------|
| 고용률 | 58.1 | 59.6 | 62.1 | 62.3 | 63.7 | 65.1 | 66.5 |

자료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충청북도의 연령대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6년 현재 30~49세 연령층의 고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0~64세까지의 연령층이 79.1, 65세 이상이 45.2% 순으로 나타났다. 15~64세까지의 연령층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표 16> 연령별 고용률

| 구분 | 전체 | 15-29세 | 30-49세 | 50-64세 | 50-64세 | 65세이상 |
|------|------|--------|--------|--------|--------|-------|
| 2013 | 59.5 | 35.2 | 79.5 | 77.5 | 77.5 | 46.0 |
| 2014 | 61.2 | 38.6 | 81 | 79.1 | 79.1 | 46.4 |
| 2015 | 62.1 | 38.2 | 80.6 | 78.7 | 78.7 | 46.3 |
| 2016 | 62.4 | 40.8 | 80.7 | 79.1 | 79.1 | 45.2 |

자료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임금과 근로 시간을 조사한 시도별 임금 및 근로 시간 보고서(2017)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2017년 4월 기준 사용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3,304천 원)은 전년 동월 대비 120천원(+3.8%) 증가하였으나, 전국 대비 217천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용 근로자 1인당 총 근로시간(181.1시간)은 전년 동월 대비 4.5시간(-2.4%)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국 대비 7.9시간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임금총액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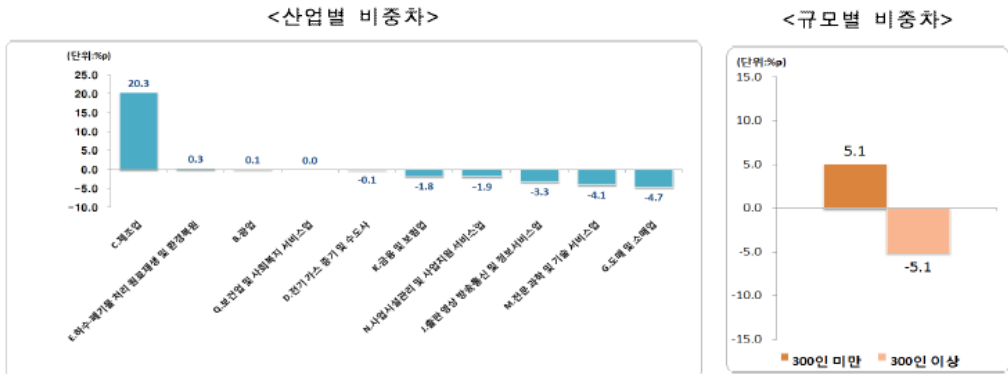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 | 임금총액 | | | | 총근로시간 | | | |
|----|--------|--------|-----|-----|--------|--------|------|------|
| | '16.4월 | '17.4월 | 증감 | 증감률 | '16.4월 | '17.4월 | 증감 | 증감률 |
| 충북 | 3,184 | 3,304 | 120 | 3.8 | 185.6 | 181.1 | -4.5 | -2.4 |
| 전국 | 3,416 | 3,521 | 105 | 3.1 | 176.7 | 173.2 | -3.5 | -2.0 |

자료 : 고용노동부(2017). “시도별 임금 및 근로 시간 보고서”.

<그림2> 충청북도 노동 현황

○ 충청북도는 제조업 상용근로자 비중이 전국보다 높음



* 상용근로자 비중차(시도-전국)가 '0'보다 큰 경우 전국보다 비중이 높고, 작은 경우는 낮음을 의미
 * 2015.12월 기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비중)

자료 : 고용노동부(2017).“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보고서”.

충청북도는 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5년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중장년 등 생산적 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 서비스 제공, 산학관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 지원, 기업 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 지원 사업, 밖에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일자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충청북도는 「민선6기 지역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총 377,03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18년 목표 101,970명의 일자리 창출 달성 시 민선6기 목표인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점 추진 분야로 청년 및 사회적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프로그램 지원 운영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 제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지원(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데, 분야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8> 충청북도 일자리 추진 내용

| 분야 | 추진 내용 |
|-----------------|---|
| 청년일자리 | 충북형 청년공제, 청년임금 격차해소 지원,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등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 |
| 여성일자리 | 새일여성인턴제,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 사업 등 |
|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 9988 행복나누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사업 등 |
| 중장년 일자리 | 생산적 일손봉사 |

자료 : 충청북도인터넷신문(2018).

② 주 52시간 상한제와 노동 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52시간으로 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다. 장시간 노동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 생산성, 산업재해 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업종도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휴일 근로가 산수당 할증률과 관련하여 하급심 법원도 각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 산업 현장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연장 휴일 근로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의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을 통해

장시간 노동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2018)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시행되면 줄고, 전체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평균 35시간 줄어든다. 다른 조건에 변함이 없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19만 명(주52시간 근무) 내지 25만 명(주40시간 근무) 늘릴 수 있다고 하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52시간 상한제 시행 이후 노동시간이 줄어든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3만명 가량을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 가운데 22.4%인 813곳에서 총 2만9151명을 새로 뽑는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적용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이 일부 남아 있고 단축대상 사업장이 당장은 300인 이상 규모로 제한되긴 했지만,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노동부 조사로 나타났다.

4)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추진

최근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복지서비스 제공으로의 전달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에서 지역 사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인 서비스에 욕구기반과 이용자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리 단위의 정책 결정과 실행은 지역화 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김용득, 2018).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서비스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문재인 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해 도시 지역의 소원했던 이웃 간의 공동체 복원, 농촌 지역의 노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와해 되어가는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1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과제

| 분야 | 추진 과제 |
|--------------------------|---|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지역행정 기반 구축 · 보건·복지 서비스 전담인력 확충 관리 · 민과 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주도 보건·복지 연계모델 창출 |
|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자치 | ·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읍면동 행정 혁신 |
| 주민의 손으로 직접 만드는 마을사업 | · 마을단위 지역사업 연계 지원 · 시책 사업을 통한 특화 마을 모델 창출 |
| 주민자치, 전국 마을에서 마을로 | · 우수사례 발굴 확산 · 범정부 추진체계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 |

자료 : 행정안전부(2018).“2018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은 2014년 시작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사업 성과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철학은 주민을 존엄한 인격체로 세우는 것에 있으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과를 전국 정책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가시화는 결국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보편적 복지강화, 공동체, 자치를 묶어내는 정부정책 추진의 방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보건복지에서 시작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대규모 정규 인력 투입, 복지와 마을의 결합,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혁신지향 등 여러 면에서 독보적인 정책이었다. 성공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당시 복지사각지대의 확산과 심화, 복지의 권리성과 공공성 담보, 관계의 단절에서 나타나는 고립무원의 절망감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병리 현상을 끊어내야 한다는 절박함이 전인미답의 길에 과감하게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하였다(보건복지포럼, 2017).

사업의 성과로서 핵심 기반인 인력의 과감한 확충을 통한 복지공무원 1

인당 복지대상자 56%감소, 현장방문 2.6배 증가, 보편적 공공서비스 지향 65.70세 어르신 보편 방문률 55%증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동당 월 21가구, 주민소모임, 나눔 이웃 등 주민마을 활성화, 마을계획 55개동 시행, 서울형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주민자치 제도화 선도, 소통과 협치(시 연석회의 110회), 직원 인식변화(업무내용 방식 변화 69%)가 나타났다(서울시, 2018).

서울연구원(2016)에 따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새로운 주민자치의 모형 혹은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며,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인 복지와 보건사업을 확충하고, 대시민 접촉을 ‘찾아가는’ 방식을 통해 넓힘으로써 시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동주민센터 내로 끌어들이므로써 복지와 보건을 포함한 삶과 관련된 시민들의 생활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율형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제 3세대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적 제도로서의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 동주민센터에 기존 복지 행정 수행 업무 뿐만 아니라 보건 및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차별적 잔여적 성격을 지양하고, 누구라도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요청하거나, 서비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포괄적인 주민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가능하고, 또한 이를 통해 자립적 지역 자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았다(서울연구원, 2016).

② 취약계층 돌봄 체계 커뮤니티 케어

2018년 3월에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설명하였다(김용득, 2018).

커뮤니티 케어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돌봄 관련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화 요구, 분절적 예산사업 단위가 아닌 포괄적인 접근필요, 보건과 복지의 통합, 재가,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통한 당사자의 삶의 질 제고, 선택권 제고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으로 1997년부터 성장주도 잔여적 복지에서 2017년을 기점으로 복지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고자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케어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시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의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표 20>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

| | | |
|--------|---|---|
| 비전 |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 | |
| 추진 방향1 |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 등 돌봄 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확충 · 안전관리 등 사회서비스 확충 |
| 추진 방향2 |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중심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
| 추진 방향3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 후 재가복귀를 위한 경로 설정 · 주거, 일자리, 소득 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건 조성 |
| 추진 방향4 |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률 유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서비스 공급 및 이용을 위한 기반 강화 · 시설, 병원 등 평가체계 개선 추진 |
| 추진 방향5 |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커뮤니티 케어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강화 · 서비스 안내·연계 기능강화 (읍면동 케어 통합창구) |

자료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2018). “한국지역사회복지체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다음과 같은 검토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21> 커뮤니티 케어 검토 과제

| 검토과제 | 세부내용 |
|--|---|
| <p>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서비스 중심,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 사회서비스의 단계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이 커버하지 않는 등급외자, 장애인, 아동 등 - 수요가 높은 돌봄 서비스 우선 확대 추진 · 지역사회 안심 생활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R&D를 통한 영역별(생활지원, 안전, 정서 등) 서비스 발굴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반영 추진 |
| <p>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체계 강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 취약 계층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용 호스피스 정신건강 사례관리 ·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
| <p>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관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관리 강화 - 적정 수가로 개선 - 장기 입원자 사례관리 확대 등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 적정 이용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 장애인 등 탈시설 욕구가 높은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 연계 |
| <p>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책지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복귀 경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 퇴원 지원 - 중간 서비스 모형 도입 · 주거 연계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 연계 -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
| <p>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협의회, 공동모금회, 사회복지관 등 - 지자체-복지관 간 사례관리 등 정보 공유 · 커뮤니티 케어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보장계획 실질화, 내실화 - 지역케어회의에 보건소 적극 참여 |

자료 :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2018). “한국지역사회복지학계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통해 ①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게 맞는 돌봄을 받음으로써 인권과 삶의 질 제고 ② 가족, 이웃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삶의 가치 복원 ③ 의료비 등의 복지재정 급증추세 억제+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④ 지역사회 지원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③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활성화

개인적 삶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는 삶을 지속할 수 없으며, 마을이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서로 뭉쳐 간단한 일이라도 시작해보자고 모인 것이 현대 마을공동체가 나타난 시초이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목적만을 위한 결합과는 성격이 다르며,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문제 혹은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힘을 합쳐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와 같이, 서로 간의 특정 의식이나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점은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다(충청북도, 2017). 또한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이 스스로 지역 내의 자원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것인데, 마을공동체에서 정치는 대단히 유기적으로 결합되기 마련이며, 경제적으로도 경쟁보다는 협동과 상생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문화 역시, 혼자 혹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성격보다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격의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을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공동체 내의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공동체의 공단을 중심으로 문화를 영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정치적으로 주민들의 자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은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가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는 특정한 의식과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점 외에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을이라는 지역적 제약 안에서 정치적 자치·경제적 상생 그리고 공동체 문화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집단을 의미한다(충청북도, 2017). 지속 가능성이 현대 마을공동체의 유일한 목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마을공동체들이 의식의 공유나 문화 등을 통해 나름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충청북도, 2017). 의식과 가치관의 공유, 지역 내 자원을 통한 정치·경제·사회문화 형성, 및 공통의 목적 추구는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마을이라는 지리적 제약 안에서 정치·경제·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처리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달성할 경우 마을공동체 의미를 가장 잘 부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충청북도, 2017).

도시 중심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자립지원, 맞춤형지원, 인큐베이팅 지원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경제공동체(마을기업, 상가마을 공동체), 문화 공동체(마을미디어, 마을 예술 창작소, 마을 북 카페, 한옥 마을 공동체), 주거공동체(안전마을, 아파트 마을 공동체, 에너지 자립마을), 돌봄 공동체(공동육아, 다문화마을, 청소년 휴 카페, 부모커뮤니티), 통합형(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지원, 주민제안사업)등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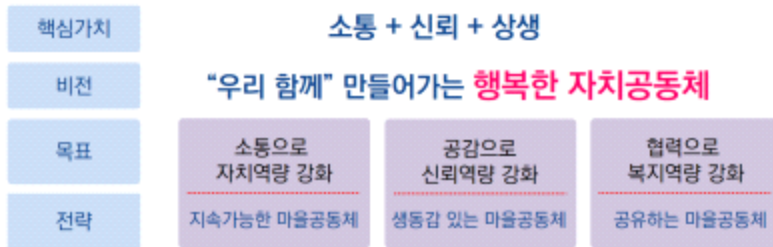
마을 공동체 사업은 이처럼 경제, 문화, 주거, 돌봄 등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서울연구원(2017)은 마을 공동체 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 그리고 마을 활동에 있어 개인과 모임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최종적으로 자립적인 마을 공동체 이루기라는 사업의 주요한 목적을 중심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남성, 청년 상류층은 각자 정책 수요가 낮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원인으로 볼 때 정책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30~40대 여성, 중산층집단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사례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인적 자원의 역할의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역량이 곧 주민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일자리 즉 지역 특성 맞춤형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서울연구원(2017)이 2015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민제안사업이 일자리를 총 2,732개 발생시킴에 따라 한국은행 취업 유발계수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은행 취업유발 계수 중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업(41.0/10억원)보다도 약 4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계망으로 사회, 경제, 주거,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문제 해결방식으로 등장한 마을 공동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2016. 12. 30)』를 제정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충청북도, 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비전, 목표,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다(충청북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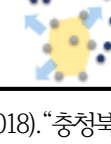
<그림 3>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비전 및 추진과제



자료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마을 형성 단계별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22> 마을 형성 단계별 세부 과정

| 마을 형성 단계 | | 세부과정 |
|-----------|---|--|
| 터 다지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잠재가능성 파악 : 자원, 인력 ▶ 특화사업 발굴 · 마을의 현안 파악 · 마을 공동체 일꾼 양성, 주민의식 제고 · 마을공동체 인지도 높이기 |
| 관계맺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거점 설정 · 마을공동체 형성 : 공동체 결속력 및 유대강화 · 주민간의 화합증대 · 마을사업의 발굴 : 주민들의 참여, 사업의 확정 |
| 뜨락 형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사업 고도화 · 세부사업의 실행 · 특화부문의 마을 전문가 양성 |
| 뜨락 활성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체 성공사례 발굴과 확산 · 성공한 마을공동체 내 연계 특화 발굴 |

자료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마을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야할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들을 공통형 사업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3> 마을공동체 공통형 사업

| 추진과제 | 사업개요 |
|----------------------------|---|
| 정보기반 구축 계획-평가체계 구축 |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마을공동체 초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주민의견 반영구조 확립 |
| 협의체계 구축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의 위한 협의체계 구축 |
| 공동체 성장관리 | 마을공동체 관련 다양한 시책 발굴 및 업무 추진 시 DB 활용 |
| 마을공동체 인식확산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백서 및 우수 사례집 제작·보급을 통한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이해와 인식 제고 |
| 주민 역량강화 | 충청북도 학습공동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 발굴 및 육성 |
| 공공 역량강화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 및 인식개선, 전문지식 제고 |
| 지역 역량강화 | 지역 비전 도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유 및 주민자치회 네트워크 구축 |
| 공동체 협약체계 구축 | 충청북도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기관 및 공동체와의 협약 지원을 통한 기업 및 공동체의 시장 지속성 보장 |
| 공동체 간 협력강화 | 마을공동체 설립 초기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할 민과 관의 관계를 정립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역할을 정의해나가는 단계의 사업 |
| 마을과 마을 연결하기 (상생네트워크) | 마을공동체가 안정화에 들어선 이후, 다른 마을과 연계를 통해 성공사례를 나누고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함 |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터다지기, 공동체(관계) 형성, 트랙형성, 트랙 활성화의 단계별로 마을공동체 맞춤형 지원 |
| 공동체 활성화 의제 발굴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지역 자원·특성·의제에 기반하여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
| 주민모임 활성화 |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형성단계 터 다지기, 공동체 관계형성 단계를 거쳐 기반 구축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 공모사업 진행 |
| 우리마을 가꾸기 | 이전 단계의 각종 모임과 활동으로 유대관계를 다지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마을 가꾸기 활동 실시 |
| 우리마을 살리기 |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중 시급한 현안이 있을 경우 마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 |
| 마을 공유자원 활용하기 | 마을 내 공유 공간, 유휴공간을 이용하여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투입하여 마을 콘텐츠 생산 |

자료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대부분의 도시와 농촌에서 겪고 있는 현안들을 마을 공동체 모델로 정립하여 공동체 조성 단계부터 분명한 목적과 지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맞춤형 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충청북도, 2018).

<표 24> 마을공동체 맞춤형 사업

| 유형 | 주요사업 및 활동 |
|------------|--|
| 안전.안심 | 마을전반 셉테드 적용을 적용하고, 셉테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모델. 자연재해와 범죄, 인재 등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배움 | 작은 도서관과 유희공간을 거점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 제공하는 모델 저소득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이 겪는 사교육 격차를 감소시키고, 배움의 질을 높이는 기회 제공 |
| 돌봄 | 맞벌이 가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아이 돌봄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의 돌봄을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실시하고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이해하는 문화조성으로 외롭지 않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델 |
| 문화역사 예술 |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 살리고 주민의 문화향유 수준을 높이는 모델 (마을 갤러리, 마을 역사 카페 등) |
| 환경 /에너지 | 지역 내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이로 인한 문제가 많은 지역에서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을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청결한 마을을 조성하는 모델 |
| 힐링 | 자연재해나 재난이 있었던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마을 분위기 활성화 활동 중심의 모델 |
| 사회적 경제 |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을 단위의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모델 |
| 자연가치 | 숲이나 하천, 강과 같은 자연에 인접한 마을이 자연을 보전 및 보호함으로써 마을과 자연의 가치를 함께 높이는 공존하는 마을 모델 |

자료 : 충청북도(2018).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④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중소 도시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따라 도시 소멸 위기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작년부 터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17년 12월, 68곳 선정), 전문 연구기관, 전문가, 지자체,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해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에 앞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5> 도시 재생 뉴딜 로드맵 주요 내용

| 정책목표 | 3대 추진전략 | 5대 추진과제 |
|-------------------------|---------------|--|
| ① 삶의 질 향상 ② 도시 활력 회복 | ① 도시 공간 혁신 | 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 |
| ③ 일자리 창출 | ②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 ③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참여 유도 |
| ④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 ③ 주민과 지역주도 | ④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 |

자료: 관계부처합동(2018).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 재생 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하여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 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동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

부터 동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 협의체 구축, 상생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가 조성 되어 지역의 영세상인 등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그 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 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특히 뉴딜(New Deal)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 도시 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관계부처 합동, 2018).

⑤ 공생의 지역 경제 -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는 프랑스의 경제학자 Charles Gid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arles Gide는 시장경제체제가 사회적으로 중점적인 경제 체제가 되며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행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믿었으며, 시장경제체제에서 보다 공평한 사회적 경제체제로 시장경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적 경제 개념을 사용하였다(주성수, 2017).

주성수(2010)는 사회적 경제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의미하며, 제3섹터를 통해 빈곤과 실업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전략적 접근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국가 실패와 시장실패 다음의 ‘제3의’대안이 되며, 국가와 시장이 공급하지 않고 또 그런 의지가 없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영리 조직의 역량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하고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하였다(주성수, 2017).

사회적 경제는 빈곤과 실업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목표로 추구하며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시민권을 강화하며 회복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복지 국가의 정책, 실업의 위기 상황,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은 새

로운 사회적 경제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사회적 경제 영역이 점차 거대한 ‘비영리’ 시장을 형성하며, 식당, 재활용, 마이크로크레딧, 공동체 개발 등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조직들의 등장을 조장한다. 사회적 경제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해체에 맞서 기업가적 비즈니스 활동으로 빈곤과 실업을 타개하는 새로운 기업 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비영리성이다.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은 경제적 목적에 우선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활동에 필요한 지출을 자체 충당하는 수입을 만들어야 하지만, 수익활동은 사회적 목적 달성의 범위에 한정한다(Quarter,1992 : 주성수 재인용, 2017). 사회적 경제는 비영리 조직이므로 주된 목적이 자본에 대한 수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자 경제’의 일부이며, 또 공익의 욕구에 의해 그리고 공익의 욕구를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책무성을 가진다(EC,2001;주성수, 2017). 둘째는 민주성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종사자나 이용자에 의한 민주적 정책결정에 의존한다. 이 점이 일반 비영리 조직과 구분되는 사회적 경제의 독특한 특성이다. 사회 경제의 원칙상, 사회적 경제 종사자들은 소유의 몫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조직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한다(Arther et al,2005 ; 주성수 재인용, 2017). 셋째는 참여와 연대 그리고 사회자본이다. 사회적 경제란 “회원들의 욕구에 기초해 회원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 중심의 조직과 기업”이며, 사회적 경제의 목표는 사회적, 민주적, 그리고 연대 기초적 목표들이다(Lukkarinen, 2005 ; 주성수 재인용, 2017).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개발 효과는 질적 고용, 사회자본의 증대, 민주주의 강화, 지방정부와 사회적 경제 조직 사이의 파트너십 모색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영리추구적 기업과 정부기관과 파트너십 공조로 고용 증대, 사회자본 축적, 시민사회활성화 등 지역개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시장이나 기존의 공공 제공으로 충족되지 않는 지역의 욕구충족”에 목표를 두고, 노동 시장에서 불이익 계층의 고용가능성을 증대시켜 이들에게 고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Arther et al,2005; 주성수, 2017 재인용).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연대에 의해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면서 사회 자본을 축적하는 사례들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Vailancourt et al, 2003 : 주성수 재인용, 2017). 캐나다 몬트리올의 2,000개에 달하는 주택들은 사회

적 경제 조직이 담당하는 주택 및 의료, 복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 받는다. 이런 ‘사회적 주택’을 조사한 연구진은 주거 안정과 서비스 제공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이웃관계 개선, 자존심 회복 등 사회자본 효과도 대단하다고 한다. 이는 주민들이 단순한서비스 수혜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이들의 관심과 사회 자본에 의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 주택 뿐만 아니라 보육 서비스, 홈케어 서비스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참여해 공급자 역할을 하고 이용자 주민들과 더불어 민주적 조직을 운영하는 새로운 변화는 1990년대 캐나다의 보편적인 동향이었다.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은 ‘수혜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의존’이 아니라 ‘자율’로 시각이 바뀌면서, 정부의 사회정책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애 정책처럼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장애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발언하고 자신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과정으로 변한 것이다. 넷째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이다. 사회적 경제는 장애인이나 실업자 등 취약층의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처방으로 주목받고 있다. 아민(Amin et al, 2002 ; 주성수 재인용 , 2017)은 ‘사회적 배제’는 단순한 빈곤과 박탈의 상태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회적 주변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화되는 과정으로 본다. 사회적 배제는 연령, 성, 인종, 이민, 위계구조, 교육 등 다양한 배경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의 누적적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임파워먼트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직접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하고, 동시에 시민 이용자, 노동자, 공동체 자치역량의 모델이 된다(Vailancourt et al, 2004; 주성수 재인용, 2017). 사회적 경제의 창의적인 사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건강과 복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그 독특한 방식은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이나 연대, 자율, 상호성, 자기결정에 기초한 방식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목표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를 통해, 일자리 마련의 역량을 통해, 또는 이용자와 노동자의 자치역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주성수, 2017).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실업과 빈곤, 경기회복, 지역 개발문제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 받았으며,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적인 환경을 갖추어 왔다.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부터 마을 기업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말에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경제의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신뢰, 연대감, 협력정신을 증진시켜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지역 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관련된 지역 경제 회복과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복지 서비스 제공 등 공동체를 발전하게 하고 번영을 위한 상호협력적인 공동체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의 활동이 있으며,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특히 지역에서 고용 위기에 노출된 장애인, 실업자, 빈곤층 여성 가정과 같은 취약 계층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식품 안전·교육·의료 서비스 제공, 생활 재개발 및 이용, 각종 주체적 모임을 통한 생활 공동체 형성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 및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충청북도, 2017).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일자리 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발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다.

<표 26>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발전 전략

| 목표 | 사회적 경제의 역량제고 |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보 | 공동체 복원 등 사회통합 |
|------|--|-------------------|--|
| |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Track 발전전략 마련 | | |
| 추진전략 | 성장인프라 구축 | | 진출분야 확대 |
| | 사회적 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 | | 사회적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 |
| 정책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지원체계 및 정책방향 확립 · 금융접근성 제고 · 판로확대 지원 · 인력양성 체계강화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 주거환경 분야 진출 · 문화예술 분야 진출 · 프랜차이즈 분야 진출 · 소셜 벤처 분야 진출 · 지역기반 연계 분야 진출 |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2018).“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분야별 구체적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7> 사회적 경제 활성화 분야별 개선 방안

| 분야 | 세부 내용(개선방안) |
|---------|---|
| 사회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지원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 지역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 서비스 표준화 등 추진 ·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선도적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화 추진 |
| 주거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활성화 관련 사업 기획 단계부터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국토부) · 도시재생·임대 주택 공급 등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국토부) |
| 문화예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활동 기반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정책 실시(문체부, 행안부) · 사회적 경제 기업을 중심으로 문화 공간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운영 |
| 프랜차이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영 성과 달성이 용이하고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육성(중기부) |
| 소셜벤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팩트 투자펀드 조성 ·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신규 팁스(TIPS) 운영사 선정 · 민간의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지원(중기부) ·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정보 제공(중기부) |
| 지역기반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행안부) · 농·어촌 기반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 지역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산업부, 농림부) |

자료: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합동(2018).“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최영출(2017)은 충북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특성 그리고 전망 연구에서

충북의 사회적 경제의 배경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그 탄생 배경으로 1989년 청주 시민회(현 참여자치시민연대)를 시작으로 충북여성민우회, 충북경제정의실천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운동이 청주를 중심으로 왕성하게 활동해 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이 충북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둘째, 다른 도의 자치단체들과 같이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도 및 시군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중간 지원 조직 기관은 사단법인 형태의 (사)사람과 경제 조직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중간 지원 조직이 현재에는 가장 유관 조직들의 네트워킹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관련 유관조직들 상호간, 특히 사회적 기업 간에 거의 네트워킹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사람과 경제 조직 외에는 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많지 않다. 즉,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적 경제 관련 유관조직들 상호간에 네트워킹이 활발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셋째, 사회적 경제의 지역발전 효과를 보면, 사회적 경제 종사자 수가 전체 충북 고용자 수의 약 0.48%로서 우리나라 전체 평균인 약 0.8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매출액 비중 면에서 보면 약 0.15% 수준으로서 종사자 수 비중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사회적 기업 수의 증가와는 달리 협동조합의 수가 감소되고 있는 점은 새롭게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고려 요인으로 1)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사회적 경제 지원 의지, 2) 중간 지원 기관의 역량 강화, 3) 사회적 경제의 공익적 홍보 강화, 4) 사회적 경제 기업가 리더십 강화, 5) 사회적 경제조직의 네트워킹 강화, 6)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 강화, 7) 사회적 경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제시하였다.

Ⅲ. 충북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의견 수렴

1. 조사 개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역별 일자리 탐색을 위해 지역 일자리 전문가(자활, 여성, 장애인, 노인, 사회서비스 분야) FGI를 2018년 9월 28일에 실시하였다.

2. 참여자 특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자활, 여성, 장애인, 노인, 사회서비스 분야로 나누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참여자로, 지역에서 각 분야별 일자리 사업 수행 경험이 10년 이상 되는 전문가를 FGI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8> 연구 참여자 세부 사항

| 연번 | 분야 | 소속 및 직위 | 구분 | 경력 |
|----|-------|---------|----|-----|
| 1 | 자활 | 기관장 | P1 | 20년 |
| 2 | 여성 | 기관장 | P2 | 12년 |
| 3 | 장애인 | 부장 | P3 | 16년 |
| 4 | 노인 | 기관장 | P4 | 18년 |
| 5 | 사회서비스 | 기관장 | P5 | 18년 |

3. 조사내용

각 영역별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및 개선 방안 및 신규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4. 연구 윤리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내용이 녹음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5. 결과

전문가 FGI 결과 각 사업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

① 참여자 특성 반영이 되지 않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운영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핵심은 상대적으로 공익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 지원의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경기복지재단, 2016). 현장에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일자리 사업 현장에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지만 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 되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자활 분야의 경우 개별급여로 바뀌면서 일자리를 선택하게 했어요. 이거 와서 해야 생계급여 주겠다고 아니라 선택하게 했어요. 자활에서 일하는 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는요. 와서 한달 내내 일해 봐야 80~90만원.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깥에서 10일만 일해도 그 정도 버니까 안하겠단다, 대신 교육급여 의료급여 받겠다, 하시는 거죠. 우선 정책 때문에 그분들이 취업 지원센터나 취업지원센터 가면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다시 자활로 오시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거기는 와서 상담, 교육 이런 거하면 되는데, 여기 와서는 일을 해야 하고, 노동 강도 차이가 있는데, 급여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노동 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돌다가 안되면 자활로 한번 왔다가 일년 지나면 다시 그 곳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 거죠. 워낙 고용지원센터 먼저 가기 때문에 인원이 줄지만 그나마 인원도 지금 들어오는 인원도 근로 능력이 낮은 분들이 들어오는 거죠. 자활의 정책변화가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취·창업 중심이고 탈수급 중심이라서 매우 어렵습니다(P1).

사업을 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의 생산성들이 떨어진다는 전제를 너무

무시하고 가는 건 아닐까? 사실은 저희도 시니어클럽 관장님이요, 조사를 하셨어요. 예를 어르신이 김밥을 싸는 1시간에 15줄에서 20줄을 마신데요. 하도 답답해서 일반 업체에 김밥 가게에 가서 몇 개를 마나 관찰을 하고 물어봤데요. 한 시간에 70~80개를 만대요. 이 건 단순히 마는 동작에 관해서만 살펴본 건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따져본다면 사실은 엄청난 일 인거잖아요. 거의 1/4 수준인거죠.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노인의 생산성이 얼마나 되냐? 60대 이상노인들 40대 젊은이의 70%의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60대이니까 그 부분인거고 70-80대 되면 그 이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관들 보조금으로 지원해 줬으니까, 그걸로 일자리를 만들어라. 하는 개념이니까 저희 같은 조직에서는 외부 자원을 따고 만들어 내서 하나를 창업을 하게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부에서는 그런 기반을 감안하고 떨어지는 생산성에 대한 보완의 역할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특히 노인 일자리 현장은요, 노인의 욕구가 전혀 반영이 안 되요. 일자리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기준자체도 9개월 사업이나 연중 사업도 있거든요. 월 27만원 일하시면 27만원 드리는 공익활동이 그렇고 나머지 시장형 같은 경우 지원금 1년이면 지원금 220만원을 주고 그 안에서 인건비를 쓰든 사업 운영비로 쓰든 초기 투자비로 쓰든 그런 형태로 주는 그런 형태고 그렇다 보니까 지원형태가 그렇다보니까 일자리를 그런 형태로 가져갈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태인거죠. 어르신들도 사실은 풀타임 할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있고 더 짧은 시간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일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어르신들의 욕구 근로형태나 유형이나 나 이런 거 나 충분히 오래 일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 반영 못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있다고 볼 수 있죠. 복지부도 이런 걸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노동부는 근로 욕구나 이런 확인하잖아요. 취업자가 오면 그런데 이쪽 영역은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안되요. 노인일자리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 희망시간은 언제고 그런 거를 반영해서 일자리를 반영해 드리려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는데 정책이 오래되다보니까 획일화가 되어버렸어요(P4).

② 중앙정부 중심, 고용 중심의 일자리 사업 운영

참여자들은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중앙 정부 중심, 취업 중심으로 획일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의 문제해결이나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업 수행방식은 인하여 민과 관의 협력은 사라졌으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사업의 전달자로, 민은 그 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로서의 역할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일자리 사업이 취업 중심 정책이기도 하지만 관주도의 획일화처럼 보여 지는 이런 정책이 되게 오랫동안 가 있는 상황인거예요. 분명히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자활이나 대부분이 지역기반의 특성이 중요하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지역 내 자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도 없어지는 거지.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의 사업을 따오는 방식으로 가다보니 어느 순간 사회적 일자리나 새로운 아이템을 지역이 고민하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일자리 사업이 없어 졌고.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이런 게 없어졌고,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되어 버리니까 지역에서 고민하는 틀들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일자리 사업은 창출은 없어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은 전국에 거의 없구요. 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거죠. 고용서비스. 그리고 정부가 뿌리는 막대한 예산들이 다 기업지원금 아니면 구직자 이서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강화시켜서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는 운영되지 않아요(P2).

복지 정책이나 궁극의 일자리가 복지에 대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하면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커뮤니티 케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지방에 손발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앙 집권, 중앙 제도에만 의존하게 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P5).

장애인도 예전보다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숫자로 증명해야하고 획일적인. 구체적으로는 변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교육부 노동부 보건복지부가 협약을 맺어서 장애인 구직자 분들의 그런 직업 진로에 대해서. 취업 진로에 취업지원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보자. 아주 섬세한 건 아니지만 공동의 노력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전히 제도 자체는 중앙 중심으로 되고 있죠(P3).

여성 분야는 원래 경력단절 여성들 즉 노동부 시스템 안에 없는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되고, 이 사람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파트나 집 근처 홍보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을 모집을 해서 사실은 교육이나 상담을 해서 취업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했고, 이러한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여성 맞춤형 방식인데 언제부터인가, 워크넷이 통합이 됐어요. 취업 실적 평가는 워크넷 안에서의 취업 실적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남이, 어느 기관이 구직자를 잡았어도 그 사람들을 취업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 여성들의 특성이 없어진 현장성이 떨어진 이런 방식이 되어 갔던 거죠.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된 기관은 전부 워크넷을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야기했던 그대로 계층의 차별성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으로 몰아가고 상황인거죠(P2).

③ 사회적 일자리 사업 전달 체계에 대한 지원 부족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강화로 각 영역별 일자리사업의 양적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달 체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담당자의 역량은 서비스의 효과적인 사업 진행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의 사업 추진에 있어 전달 체계인 기관에 대한 지원은 많은 부분 누락되어 있어 전문가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종사자들의 업무 과부하는 결국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취약 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는 등 장기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발전을 위한 노력들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여건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대표적으로 그런 예인데 양적으로 굉장히 팽창시킵니다. 정부의 일자리 확대 방안에 따라서 숫자는 계속 늘려 가는데. 그 운영 체계나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만큼 사업비를 주니까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질적인 부분이나 개선하고자 하면 전담인력도 있어야 하고 체계들이 잡혀가야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하니까. 무조건 많이 해라 이렇게만 되는 거죠. 내년에도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근로지원인 사업이 확대되는데 그 전달하는 체계나 기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발달장애인 취업을 갑자기 확대시킨다거나 이렇게 갑자기 하니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P3).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일은 20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직원 수는 줄어들고 저희는 허덕허덕하고 게다가 저희 같은 경우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하라고 지자체에서 푸시를 해서 저희는 막 열심히 해야지 고령자 친화기업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은 전혀 없어요. 총원은 바라지도 않고 월급이나 제대로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2016년 급여표 기준으로 월급을 주고 있고 그나마 한명을 못 뽑았어요. 의원님한테 가서 다 이야기해도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게 이제 풀로 찾구나,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또 일자리도 수익 창출이 되어야 젊은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것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도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이라도 쓸 수 있잖아요(P4).

노동 연구하시는 분들이 왔을 때 혹시 현장이야기는 혹시 들으시나요? 물어봤더니 현장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는데, 그 분들이 말하는 현장은 당시자가 기업이나 구직자이예요. 제가 왜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쓰지 않느냐고 물어봤어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업들을 현장에서 잘 실행하게 되게 만드는 곳이 전달 체계인데 그 어느 곳도 전달체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곳에 없어요. 전달체계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주는 걸로만 하니 장기적인 일자리로 모색하거나 고민하거나 끌고 갈 사람은 없는 거죠. 예산 지원하고 끝인 거죠(P2).

2) 충북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의견

충북지역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의견으로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가치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사회적 일자리가 취약 계층이 사회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일자리가 기능해야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일자리의 가치에 다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참여자들의 노동력, 생산성에 집중한 성과 창출이 아니라, 부의 재부분배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의 분야나 추진 방법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는 거는 다 동일한 것 같고. 그것을 위한 방법에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무원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 보편적 복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 라고 계속 물으면서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사회적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3시간짜리도 일자리도 존중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러고 나서도 손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실은 경로당 지도라사는 것들이 지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잘 훈련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마을 만들기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양성하는 것도 없고, 뭐 인증제가 있는지 답답하고..저는 주로 많이 드는 생각이..왜 우리만 계속 여기 있니?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영역에서 나눠지는 방식에 대해 제안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성이 되었던 노인이 되었던 사회전체가 만들어 놓은 가치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관한 문제로 접근하면 이게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정부에서 이만큼 정부에서 시설 지어줬으니까 ‘기관이 돈 벌어서 장애인들에게 최저 임금 줘’ 그게 아니라 집에서 있을 친구들이 같이 나와서 일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만큼 가져가야해. 그리고 여기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안전하게 이 친구들과 같이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전달체계에서의 활동도 인정해줄게 하면 되는데 효율성만 이야기하

는 거예요. 사회서비스 이야기하면 이것까지 해줘야해 이야기하죠. 오히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제안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제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영역이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시장에서가 아니라 시장에서는 머리를 쥐어짜내도 내가 저분들과 무엇을 하지 생각하면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분들이 최소한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 정도 일은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분들이 최대한 생존 가능하게 해줘. 한다면 영역이 더 넓어질 수 있겠다. 저차원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돈을 얼마 벌어야 천박하게 가는 것도 벗어나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P5).

일자리의 문제를 부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저희가 앞으로 지금의 당장의 문제 보다는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작업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도 공감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 분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론을 같이 형성해서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로 같이 이어지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민간부터 제안해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P1).

노인이 되어서 노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방식대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배우고 학습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노인이 처음 되는 거죠. 노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을 학습하면서 시니어클럽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저도 처음 살아보니까 이 나이 때는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했던 일의 연장이니깐 크게 변하지 않는데 노인들은 다 변하는 거잖아요. 내가 돌봤던 가족들이 이제 나를 돌봐줘야 하는 관계로 변하고 그런 쪽에 투입이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은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것을 해 낼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지원이 너무 없고 하려고 하지 않고. 저희 현장도 고민하지 않고 (P4).

②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통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개발 및 운영 노력

참여자들은 과거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났던 경험과 함께 이러한 지역의 협력이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협력이 의례적인 협력이 아닌 하나의 일자리 지원시스템으로 연결된다면 현장에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여러 시스템에 중복으로 입력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DB 시스템 활용하여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충북 여성 일자리 측면에서 2006년~2008년까지 민과 관이 협력해서 개발한 거예요. 방

과 후 보육, 돌봄 이런 사업을 지역에서 만들어냈고 그런 것들을 교육 훈련하면서 민이 갖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 관리의 영역인거고 예산을 따거나 제도의 영역으로 집어 넣는 건 지자체가 했었어요. 민관 거버넌스가 잘 되었던 거죠. 지역 중심으로 잘 되었던 거죠. 지금은 민은 민원인이거나 전달체계의 하부 정도가 되었어요. 지역에서 파트너십이 없어졌죠. 현재처럼 형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닌 의미 있는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된다면 과거와 같이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P2).

저희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자활에서 양곡 택배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면서 한 달에 10일만 일하니까 참여자들에게 20일은 다른 일을 찾게 해야 돼서 그것을 해결 하려고 다른 일을 무지하게 찾았어요. 저희나 같이 논의하는 사람 중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에 수화물 아파트 안의 택배까지 이야기했었다가 말다가, 계속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되었죠. 민간차원에서 이야기하다가 잘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 전에 협회랑 우정사업본부랑 이야기가 되어서 우정 사업본부에서 아파트 택배를 주겠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이거 괜찮다 굉장히 고무적이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실효적으로 얼마나 수익이 남는지 장담을 못하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관하고 연결하니까 관하고 연대하니까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모으면 연대하면 충분히 일자리가 생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전국으로 퍼진다고 하면 굳이 청주에 자활센터가 2개 밖에 안 되는데 청주의 수많은 아파트들을 다 못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시니어도 하고 장애인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예요. 다같이 같이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일자리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P1).

세상의 변화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가 DB구축이 되게 안 되어 있어요. 다른 분야보다 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서비스 하면서 서비스 중복인지 아닌지 의심하면서 이게 사실은 다른데 같으면 다른데 같으면 베이스로 관리가 되는데 아까 자활참여자 같으면 몇 만이 늘었으면 누가 얼마큼 늘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조건을 이행하는지 사실은 이게 데이터 베이스화 되어 있으면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직권으로라도 연락을 해서 제안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런 게 데이터 베이스화 안되어 있어요. 누가 어디 가 있고,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고 상황이 어떤지,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추가하면 되는지, 일자리 영역에서 무엇을 늘리면 되는지 행정기관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은 총 몇 명이고, 몇 명이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 몇 명 정도 집에서 있고 이중에 중증은 얼마고 케어가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고 어떻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화 안 되어 있어요(P5).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 통합적인 DB가 없어요. 전달 인력들은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따로 해야 하고, 복지관 자체로 따로 입력 하고 지자체에 따로 보고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졸업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기관에서 각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만든 시스템이 오히려 효율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P3).

③ 분야별 일자리 제안

전문가들은 참여대상자의 특성과 지역의 욕구를 고려하여 각 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어르신 사업으로 배달 사업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내년에 일자리가 확 늘어나면 지금 반찬가게가 3군데, 도시락이 있고 하니까 거점을 정해서 거기서 어르신이 적당한 무게의 것들 예를 들어 도시락 반찬 것들을 근거리에서 배달만 해 주셔도 기본 수요가 되겠더라고요. 저희 같이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외부에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업체의 것들이나 공익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점을 두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지하철 택배처럼요(P4).

실제로 여성 일자리라고 하면 그동안 여성들이 익숙하게 했던 삶을 자세히 보면 이걸 분리해서 일자리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여성들이 내가 책임져야할 영역하고 연결되잖아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 아이의 교육 그런 걸로 연결되는 것은 급여가 많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싶어 하죠.

이렇게 지역에서 공익적이면서도 여성 인력들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다양한 일자리들 특히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많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9시 출근 6시 퇴근의 정규직 취업지원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자신의 아이와 가정도 잘 돌볼 수 있는 일자리들이 찾아보면 충분히 일자리로 창출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2).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소득 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낮춰서 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이 서비스 확대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산후관리나 이런 것들은 소득 기준 이런 게 없으면 서비스가 더욱 일반화 되어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P5).

자활 기금이라는 걸 잘 쓰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좀 더 괜찮은 일자리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람을 나눠요. 노동 능력별로 나누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정책에 부합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잘 썼으면 좋겠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하게 되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아이디어로는 자활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노동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어느 분이 이야기하면서 작업장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만 모여서 할 수 있는 부업장도 저는 그것을 반대하긴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도 요즘에 하긴 해요.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보았을 때 혹시 그게 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농사라는 게 곡식을 생산하는 거고..땅에 대한 정직한 노력이 있어야 생산이 되는 거고..그런 것들이 일자리로서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도시농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경작하는 일 그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작과 함께 생태교육을 해서 도시 사람들에게도 즐거움과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일자리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P1).

국가의 정책 자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의무고용 제도나 아니면 미흡하면 부담금을 매기고 이런 쪽으로 치우치고 있고. 올해 들어서야 비로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하는 바뀌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의식의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더 비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 안한다고 부담금을 더 내게 한다기 보다는 이런 부분에 비중하고.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을 쓴다면 지역사회 기업체 의식을 직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표준사업장이 좋은 본보기가 될 텐데...

장애인분들이 그 업체에서 필요한 지금 현재 생산직에 대한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쪽에 계속 고용을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필요한 뭐 그 업차에서 세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회사와 상시적으로 협의해서 그 쪽 직무를 개발해서 그것을 장애인들의 일자리로 제공해주고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면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P3).

IV. 결론

본 연구는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을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 분야 사업별 추진 현황을 선행 연구 자료를 통해 검토하였고, 충북지역 일자리 전문가 FGI를 진행하여 지역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창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진행되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과학의 발전은 분명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지만 미래 사회 일자리 특히 저숙련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 격차 및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미래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면서 로봇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도 기술자와 자본가에게 부가 집중되어 사회 전체적인 부의 양극화 가능성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였다. 4차 산업 혁명의 시기에는 신기술과 대자본에의 소득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 저학력자와 고학력자, 전문가와 비전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소득 불평등 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속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사회 전체적인 흐름은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단순히 이전에 많은 사람이 노동을 통해 소득이 분배되는 구조에서 인간의 노동이 빠진 자리에 인공 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해서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미 임금으로 지불할 의미가 없고, 생산은 오히려 늘어난다면 부의 집중은 단기간에 더욱더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가 도래 되면 어쩌면 우리는 지난 1997년만큼 크나큰 고용의 문제와 더불어 경제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1997년 경제 위기의 문제는 사회 구조상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는 실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우리 사회가 실업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첫 번째였을 것이다. 상공업을 하는 실업가와 실업자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던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일자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과거 1997년 우리가 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이전에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도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한편으로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과 사회적일자리 사업이었다. 이 공공성 강한 사업을 통해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미뤄두었던 사회복지의 영역들이 일자리와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다. 우리지역의 경우도 공공근로 민간위탁을 통해 집수리 사업단, 가사, 간병 사업 등이 공공근로 민간 위탁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방과 후 교실의 교사, 학교의 독서 지도사, 경로당 복지 지도사 사업들이 일자리로 자리 잡으면서 복지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전에 돈이 되지 않아서, 또는 가족이 담당하여야 하는 몫으로 남아있던 영역의 일들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형태로 복지와 일자리가 결합하게 되었다. 이제는 환자가 생기면 당연한 것처럼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산모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일은 20세기에는 가족의 일이었고, 특히나 여성들의 일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노동이었으나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자리가 되었다.

결국 실업의 위기와 국민의 욕구는 복지의 영역을 노동과 일자리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확대 문제와 질 낮은 일자리의 확대에 따른 소득의 양극화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복지의 영역이 일자리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일자리나 복지도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없으므로 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받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

첫째,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가치 전환을 통해 개발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 이전과 확연하게 차이가 발생할 때 혁명이란 개념을 사용 하듯이 현재의 사회의 변화는 혁명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산업혁명의 시기 기계를 부수고 농토를 지키는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혁명이라

고 부르는 시기에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가 보일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가 나아가고 이를 저지해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면 어떻게 형성된 부를 나누어 같이 살 것인가가 새로운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시기에 새롭게 고민하여야 할 지점은 모두가 고학력의 고소득의 거대 자본가가 될 수 없다면, 화두는 분배가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고민이 되어야 한다. 형성된 부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일정한 정도의 소득이 가능하도록 부를 일률적으로 분배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기본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소득을 국가에서 보장해 주자는 의미니 저속하게 예기하면 기준을 정하기도 어려우니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의미가 될 것이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많고, 고민하여야 할 지점도 많지만 현재의 논의 수준에서 기본 소득의 개념에서 부의 분배가 고민되어 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하나의 방식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불리는 노동을 통한 소득 증대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보자는 정책이 가능할 것이다. 소득 주도 성장의 기본은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일자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늘어나야 그 목적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되어 왔으나, 오히려 실업자는 늘어나고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경제팀의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정책 방향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가 재정 투자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만들어질 일자리가 적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음으로 정부의 재정투자 일자리를 만들면서 알바, 일자리 나쁜 일자리라는 공격을 야당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통한 불평등의 완화와 분배 구조의 마련을 구축하는 정책적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 구조의 마련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 이야기 했듯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 임금의 인상은 그 효과가 혁명적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일 것이다. 때문에 이제 일자리에 있어 생산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사회적 일자리의 유용성 판단도 생산성이었다. 돈은 되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왔던 것이지만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생산성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고민한다면 만들어 질

수 있는 일자리는 제한적일 것이다. 생산성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반 사회적이 아니면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때문에 사회적 일자리는 취약 계층이 사회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기능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에서 가장 고려야 해야 될 사항은 노동력, 생산성을 통한 성과 창출이 아니라, 취약 계층의 소득 보장과 사회참여 가치에 기반한 소득 재분배이다.

둘째, 지역 주민의 욕구에 근거한 사회적 일자리를 개발하고 추진해야한다.

사회적 일자리를 지금과 같이 중앙 차원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내려오는 것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커뮤니티 케어, 도시 재생 사업,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같이 지역 역량강화 사업 안에서 고용이 주민의 욕구인 복지와 결합된다면 일자리로서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지역 차원의 돌봄 서비스 강화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 서비스 양의 증가를 통해 유아, 아동, 장애인, 어르신이 지역 사회 속에서 자신의 욕구대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통적으로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또한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역사·문화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청년, 청·장년층,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현재 사회적 일자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바, 정부의 재정 투자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고민해볼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공동체 정신과 상호 호혜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조직으로 취약 계층 일자리는 물론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특성을 가지고 이어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나 사회적 전체의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적합한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일

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사실상 사회적 경제 조직의 규모를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속에서 이러한 조직들을 키워내고,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모 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조직화 단계에 대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2018)에도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커다란 흐름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마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모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조직들이 보다 지속 가능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조직간의 수평적 연계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이 선결된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힘은 더욱 넓고 강력해 질 것이며, 이를 통해 마을에서 충북지역 전체로 다양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넷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일자리 전문가와 복지 전문가,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과 관의 네트워크 구성과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중앙 정부를 통해 진행되는 탐다운 방식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 방식은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문제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들을 협력과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과거 충북 여성인턴제 사업의 사례는 일자리 창출의 민관 협력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2006년부터 실시한 충북여성인턴제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가 필요한 일자리를 찾아내고 인력을 훈련하여 양성하고, 충청북도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충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우리가 현재 잘 알고 있는 경로당 복지지도사, 에듀케어, 결혼이주여성 을 위한 원어민 보조 교사 등이 이러한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창출되었고, 충북의 특화된 우수한 일자리로 정착하였다.

2007년 이후 중앙정부의 고용 중심의 일자리 사업 정책 추진으로 충청북도의 일자리사업 추진 협력관계는 다소 느슨해졌으며,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때문에 민·관의 협력을 통한 충북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민·관 협력이 잘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과 관의 원활한 협력 체계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참여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르고, 각 사업들에 대한 추진 현황이 정확한 데이터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추진 실적이나 효과성을 한 눈에 알아보기 힘들다. 가까운 시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나, 4차 산업 등의 영향력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실업은 사회적 일자리 참여 욕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 지원할 수 있는 도차원의 조직 구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도 매우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이미 일자리 수행 기관은 이미 자신들의 역할 한계치를 넘어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위해서는 일자리 전문가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다양한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하다. 관과 민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네트워크가 잘 가동된다면 충청북도만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들이 다양하게 만들어 질 것이다.

취약 계층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 노동 시장에 등 떠미는 구조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일자리를 여성, 노인, 장애인, 청년 등에서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다시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미 기존의 취업 알선, 정보의 제공 등은 총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항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으므로, 생산성이 기준이 아닌 분배의 관점에서 일자리가 고민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 주체들의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복지의 영역에서 확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고 만들어 나가는 일을 진행하여 야 할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가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들어 나아가야 할 영역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나·백혜연·김영선·오인근·배혜원, 2017,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고용노동부, 2018, “근로시간단축, 특례업종 축소, 공휴일 민간 적용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 고용노동부, 2017,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보고서 :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 관계부처합동, 2018,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 기획재정부, 2018, “2019 예산안 보도자료”.
- 김용기, 2017,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가능한가?”, 참여사회포럼 자료집.
- 김영철·이민환, 2007, “양극화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 지역사회연구 15(2): 79-104.
- 김용득, 2018, “탈시설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 연구, 17-38.
- 김우주, 2016, “노인일자리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 김유선, 2018, “주 52시간 상한제의 사회경제적 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운영·이동현·정성철·황성철, 2018,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참여자 인터뷰조사 : 자활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 김정원, 2008,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사례연구:진안군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학회지, 3-28.
- 민경자·최영출·이혜경·박종효, 2017, “충북여성인턴제의 성과 발전과 발전방안”. 충북연구원.
- 박가열·강경균·김동규·박성원·이랑·황윤하·전효리·손양수, 2016, “2030미래직업 세계연구Ⅱ”, 한국고용정보원.
-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 일자리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8,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Ⅱ)”.
- 서울시, 2016,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자리 일거리 창출 효과”. 서울연구원.
- 유태균, 2017,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 :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 이광형 외, 2015,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 이수용·김동욱·류정은·김민정, 2018, “장애인일자리사업 개편방안 연구”, 한국

장애인개발원.

이철선·박세경·권소일, 201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전략 II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 호, 2017, “4차산업혁명과 사회적 대응방안”, 부산발전포럼 164호, 부산발전연구원.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2018,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전병유 외, 2003,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주성수, 2017,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임팩트”, 한양대학교 출판부.

충청북도, 2015,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2015.

충청북도, 2017, “충청북도미래비전”. 충북연구원.

충청북도, 2018, “충청북도지속발전 기본계획”.

충청북도, 2018, “충청북도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충청북도·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018,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제91회 충북사회복지포럼 자료집」.

최조순·현동길·박예은, 2016, “경기도 사회서비스 일자리 영역 및 모델 발굴”, 경기복지재단.

최영출, 2017, “충북사회적경제의 배경과 특성 그리고 전망”. 지역발전연구, 26(3) : 63-99.

최은희, 2017, “경력단절 여성은 인적자원의 핵심”. 충북 Issue & Trend, 28; 27-30.

클라우드 슈밥,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행정자치부, 2018, “2018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안내”.

매일경제시사용어사전, <https://dic.mk.co.kr>.

정부24, <https://www.gov.kr>.

충청북도인터넷신문, <https://news.chungbuk.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

2018 충북사회복지 조사연구

- 인 쇄 일 : 2018년 11월 29일
 - 발 행 일 : 2018년 11월 29일
 - 발 행 인 : 김 영 석
 - 발 행 처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 전화/팩스 : T. 043)234-0840 F. 043)234-0849
 - 홈페이지 : www.cwin.or.kr
- * 판권소유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 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가 불가능함
-

2018. 충북사회복지 조사연구 보고서

사회변화에 따른 충청북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w w w . c w i n . o r . k 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